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5.9.30.(화)

과학기술·인공지능 총괄 부총리 체제 본격 출범

-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신설 및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 출범
- 인공지능정책실 신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성공적 이행 뒷받침
- 대변인 실장급 상향, 대국민 정책 효과 및 성과 홍보 기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됨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어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 타워로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과기정통부 관련사항 】

- 제19조(부총리)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생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 제3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인공지능 정책,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 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흩어져 있던 정부, 민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하여 범부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한다. 새로운 회의체는 단순한 안전 처리형 회의가 아니라, 부총리 총괄·조정하에 국가적 노력 경주가 필요한 아젠다를 기획하고 공유함으로써 전부처의 노력을 원팀으로 묶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존 국(局) 단위였던 인공지능 전담부서(인공지능기반정책관)를 ‘인공지능정책실(室)’로 확대·강화한다. 산하에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둔다.

【 인공지능정책실 조직도 】



인공지능정책실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조직으로서,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법·제도를 설계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능에 주력한다.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인공지능컴퓨팅 자원·데이터·클라우드 등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산업·지역의 인공지능 활용 및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과 정책효과를 언론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재 국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부총리 부처로서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일반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정부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삶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부여받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최미정 (044-202-4440)
		담당자	사무관	양민영 (044-202-4443)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직도 - 개편후

